

# '개헌 · 추경 제동' 한국 · 바른미래 맹폭

## 민주당 발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요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 민주당 "3연속 거부는 국회 퇴장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헌정특위를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추경 등을) 바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제1야당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가장 큰 훼방꾼이 되고 있다"며 "홍문종 지키기를 위해 개헌을 막는 방안 국회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안이 아닌 민주당안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대통령 발의안은) 민주당과 대통령의 공동 개헌안이다.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데 어찌 다를 수 있느냐"며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여당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다"고 맞섰다.



“선거연령하향 꼭 해주세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작식에 선거연령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이 기술시위를 하고 있다.

거부까지 3연속 거부는 쓰러야 한다. 국회 퇴장감이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회기 내 처리 요구에는 민주당안은 물론 한국당, 정의당안까지 함께 논의해 최적의 안을 찾자고 말을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법 말 바

꾸기를 한 적이 없다"며 "최선의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개정안은)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독립할 방안을 찾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원내수

석은 "방송법을 4월에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씨앗도 트기 전에 열매 달라는 속도위반"이라며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와 과방위 간사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는 없고 개헌과 추경 막기용 임시회 파탄이 주목적이라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 양용모 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 현안 건의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장과 이혜숙 교육위원장은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양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은 2011년 군산지역 생산액 6조2천억 원에서 2015년 2조5천억 원으로 59% 감소했고, 수출은 44억8천억 불에서 2016년 8억6천억 불로 80% 줄어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군산경제 파탄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잃어 가족 포함 군산시 인구의 26%인 7만여 명이 생계위기에 봉착하는 등 경제위기 여파가 최악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장은 "지난 5일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회생 대책이 아닌 만큼 군산조선소와 GM공장의 재가동을 위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울러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예타면제와 국비 200억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도의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이 1천31건에 7조 6,661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부처예산이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는 만큼 부처 단계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편성에 전북의 사업과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 '공영방송 공론화위 운영' 방송법 개정안 제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비공개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은 바른미래당 측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 새 개정안을 제시하며 비공개 협상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편이 수용할 수 있는 방송법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안했는데 못 받았다고 한다"며 "김 원내대표가 새 안에 대한 답을 할지 안할지 모른다. 지금은 부정적으로 답하는데 좀 더 생각해보고 답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 측이 제안한 새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복잡하기만 하고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소리다. 인사문제 그걸 왜 부작용이 없다. 사장 후보들이 공론화위원들을 만나서 인사청탁을 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할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석에서 답해줬다. 고심은 했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며 우 원내대표에게 역제안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중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진 추천 비율'을 기존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수정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받아들여 4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는 "우 원내대표는 이렇게 좋은 안을 거부하고 가더라"라며 "(이사진 비율 5분의 3 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정부여당 입장도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겠다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장악 의지가 있는 민주당과는 더 이상 대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4월 국회 내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야권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법 처리를 개헌안과 추경예산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뉴시스

# 김광수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금지법' 발의

## 의원면직 처리로 불이익 없어... 해임 외 처벌규정 없는 공공기관 징계제도 맹점 보완 시급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 시 갑)은 10일, 채용비리 기관장들이 의원면직을 통해 퇴직금 및 취업제한에 불이익 없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사며 비리 기관장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지만 솥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맹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 없이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있어 해임사유에 이르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정부는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90개 공공기관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기재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등 중앙부처 산하기관 33개, 지방공공기관 산하기관 26개, 공직유관단체 9개 등 총 68곳 109건을 수사의뢰하였다.

그러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관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

리하여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액되는 등 비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징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공개되면서 원칙과 청렴이라는 공공부문의 기본 덕목 훼손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며 "특히, 비위행위를 한 기관장들은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등의 관행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 금지법'을 발의했다"며 "채용비리를 비롯해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묻고,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